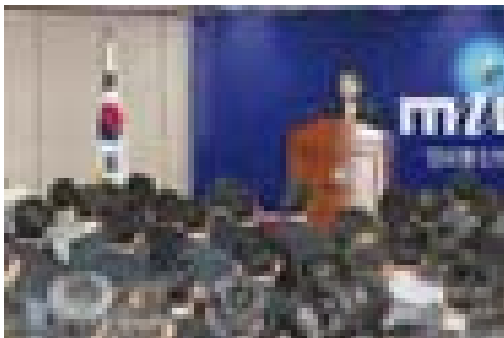


정보통신정책뉴스

유영환 정보통신부 제11대 장관 취임

➔ “모든 정책 국민편익을 최우선으로...”



유영환 신임 정보통신부 장관이 9월4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오후 2시 정통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취임식을 시작으로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유 장관은 취임사에서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과제를 잘 마무리함으로써 새로운 IT 발전방향을 의제화해 차기 정부에 이양하는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평소 소신인 세 가지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모든 정책은 국민편익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는데 최우선을 두고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세부 정책과제로 ▲방송통신융합 추세에 적극 대응 ▲통신규제 로드맵 마무리 ▲IT839 상용 서비스 정착 ▲정보화 역기능에 강력 대응 ▲국가간 IT협력 ▲우정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을 꼽았다.

➔ 한국 IT, 2010 남아공 월드컵 지원

정보통신부는 9월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정통부, 산하기관 및 민간기업의 IT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남아공 IT자문단(단장: 민원기 정통부 부이사관)을 현지에 파견해 남아공 IT 지원 자문활동을 벌였다. 이번 IT자문단 파견은 지난 5월 방한한 음람보 누카 남아공 부통령과 카사부리 통신부 장관이 노준형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국의 종합적인 IT지문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남아공은 2010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다각도의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IT자문단은 남아공 통신부에서 양국 간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4일간 Telkom(남아공 기간통신사), ICASA(방송통신규제기관), SABC(국영방송사) 등의 기관들을 방문하여, 남아공의 IT현황을 진단하고, 한국의 IT발전 경험을 기반으로 남아공의 IT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 IT기반 융합화 전략 심포지엄 개최

IT 기반 융합화 선도전략 심포지엄이 정통부 주최,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주관으로 9월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은 두 세션으로 나누어 '국가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IT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고령화, 국방, 안전 분야를, 'IT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주제로 조선, 자동차, 의료, 농업, 물류, 건설 분야와 IT와의 융합문제를 다뤘다.

심포지엄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주제발표와 패널토의를 통해 고비용-저효율 형태의 현행 국가산업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IT기반 융합화 전략이 제기됐다.

→ 정보보호법, 이용자 권익 강화 위해 대대적 손질

정통통신부는 유비쿼터스, 통신·방송 융합, 웹2.0, UCC 등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보호법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8월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대응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

보통신망법')을 '방송·통신시스템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이용자보호법'의 3개 법률로 분리·확대시키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정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정보보호법 발전방안을 연말까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보다 구체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법률안 마련과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전파응용설비(ISM기기) 규제 대폭 완화

정통부는 ISM대역을 이용하는 ISM기기의 기본과 전계강도 제한을 폐지하고 일부 ISM기기를 허가대상에서 인증대상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8월27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ISM기기에 대한 규제가 외국보다 엄격하여 개발 및 이용이 많이 제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는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기기들이 국내에서는 시장출시가 불가능하고, 이러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ISM기기의 개발을 촉진하고, 합법적으로 기기들이 사용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고주파조명기와 같이 인체에 무해하고 대량 생산·사용되는 일부 ISM기기는 제조업체의 인증만으로 시장출시가 가능토록 하여 시장확대의 길이 열렸다.